

文대통령, 26일 '개헌 발의' 준비 지시

야당에 일주일 시한 '최후통첩' ... 국회 합의 압박·실패시 책임 야당으로 돌리겠다는 다목적 포석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6일로 기한을 못박아 개헌안의 대통령 발의 준비를 지시하며 6·13지방선거에서의 동시 국민투표를 진행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법적으로 가능한 최대한의 한계 시점까지 기다렸다는 점을 강조한 것은 명분을 이용해 국회 합의를 압박함과 동시에 합의 실패시 책임을 야당으로 돌리겠다는 다목적 포석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진성준 청와대 정부기획비서관은 19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헌법 개정안을 26일에 발의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진 비서관은 "이같은 지시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로 기한은 준수하되 국회가 개헌에 합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드리기 위한 것"이라며 문 대통령의 지시가 '최후통첩'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당초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해외순방 일정(22~27일)을 감안해 ▲출국 전 발의 ▲순방 중 발의 ▲순방 후 발의 3가지 시나리오를 놓고 고심해 왔다. 다만 출국 전 발의 방안은 대국민 설득 시간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귀국 후 28일 발의 발의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전날까지 21일 발의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되던 상황에서 26일로 대통령 개헌안 발의를 연기해 달라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요청이 제기됐고, 청와대가 이를 수용한 모양새가 됐다.

진 비서관은 "당초 대통령은 22일부터 28일까지의 해외순방일정을 감안해 귀국 후에 발의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헌법이 정한 국회 심의기간 60일을 보장해달라는 당의 요청을 수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법에 따르면 개헌안이 발의되면 국회 심의기간 60일을 보장해야 한다. 국회가 헌법 개정안을 의결하면 국민투표를 위한 사전공고를 18일 전에 해야하므로 최소 78일이 필요하다.

여기에 대통령의 발의 직후 개헌안을 정부로 이송하고 다시 국회로 보내는 등 통상의 절차상 2~3일이 더 필요하다. 청와대는 이러한 행정절차일까지 감안해 지방선거일로부터 역산, 개헌이 가능한 최소한의 발의 시점을 21일로 잡았다.

하지만 우 원내대표가 개헌안 발의와 동시에 국민투표 사전공고를 하는 방식을 취하면 마지막날인 26일이 된다며 대통령 발의를 5일 가량 늦춰줄 것을 요청했고, 청와대가 이를 수용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26일 발의와 공고가

한꺼번에 다 이뤄져야 한다. 그리고 또 국회 의결이 이뤄지고 또 동시에 공고가 이뤄져야 한다"며 "그럴 때 6월13일 지방선거일에 국민투표가 가능하다. 그 마지막 시한이 26일"이라고 덧붙였다.

종합하면 청와대는 발의 시점을 21일로 예상했다가 문 대통령 귀국 후인 28일 발의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고, 여당의 요청에 따라 26일 발의하는 것으로 결론내리게 됐다.

당초 21일보다는 5일 늦춘 셈이 되고, 귀국 후 28일 발의한다는 계획보다는 이를 앞당긴 것이 된다. 다만 대통령의 해외순방 중에 개헌안 발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 불가피하게 전자결재 방식을 취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21일보다는 5일 늦춘 셈이 되고, 귀국 후 28일 발의한다는 계획보다는 이를 앞당긴 것이 된다. 다만 대통령의 해외순방 중에 개헌안 발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 불가피하게 전자결재 방식을 취할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무총리 주재의 임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관련 내용을 (순방지에서) 보고받은 뒤 전자결재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무총리 주재의 임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관련 내용을 (순방지에서) 보고받은 뒤 전자결재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무총리 주재의 임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관련 내용을 (순방지에서) 보고받은 뒤 전자결재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개헌안을 나눠서 공개하기로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와관련 "한꺼번에 공개하면 양이 많아서 국민께 소상히 말하기 어렵다"며 "나눠서 공개하는 것이 기본권·지방분권에 대한 국민 관심과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면에는 향후 3일 안에 국회에서 대통령 개헌안의 수용 여부 대한 논의할 시간을 마련해 주기 위한 측면도 없지 않아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가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한다고 해서 국회 논의가 그순간에 종료된 것은 아니다"라며 "국회는 얼마든지 합의할 시간 있기에 그것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한 것은 이같은 관측에 무게를 실는다.

즉, 야당이 국회 합의 개헌안을 요구하는 것은 6월 지방선거 동시투표 무산의 목적이 있다고 보고, 대통령이 발의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청와대의 판단이 깔려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우리 헌법은 대통령과 국회의원에겐 모두다 개헌 발의권을 부여하고 있다"며 "앞으로 한달 여의 시간이 더 남아있으니 대통령이 발의하지 말고 국회에 넘기려는 것은 과도한 주장"이라고 말했다. /뉴스

민주당 도당, 지방선거 후보 철저 검증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6·13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후보 검증을 철저히 하고 있다.

19일 민주당 전북도당에 따르면 최근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예비후보자 공모를 받았다. 3차 접수까지 총 340명(1차 201명, 2차 101명, 3차 38명)이 신청을 했다.

신청자 340명 가운데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총 7명에 대해 부적격으로 결정했다. 또 5명에 대해서는 정밀심사 대상으로 분류했다.

이외반면 자격심사를 통과한 사람은 민주당 후보로 선관위에 예비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게 됐다.

현재 민주당은 당헌 당규에 따라 민생범죄(사기, 공갈, 폭행) 등에서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당의 공직후보로 나서려할 경우 부적격 판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마지막이자 4차 예비후보자 공모를 오는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진행한다. /김진성 기자

도의회 행자위 '시 군의회 의원정수·선거구 확정'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중철)가 19일 회의를 열어 안건으로 상정된 '전라북도 시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당초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기초의원 선거구별로 인구수 70%, 읍면동수 30%의 선정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산출한 결과, 전주읍이 9명, 전주시이 10명, 전주군이 11명이 배정되는 결과가 나왔으나, 이는 2014년 대비 의원수가 전주읍은 8명에서 9명으로 1명 증가, 전주시는 8명에서 10명으로 2명 증가, 전주군은 14명에서 11명으로 오히려 3명 감소하는 결과가 나오게 되 인구가 7,158명으로 가장 많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주군은 시의원수가 3명이 감소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나왔다.

따라서 이러한 불합리한 점의 극복과 완산구와 덕진구의 지역대표성 등을 고려해 도의원 선거구별이 아닌 국회의원 지역구를 기준으로 전주읍과 전주시, 전주군의 지역구별로 인구수 70%, 읍면동수 30%의 선정기준을 적용하여 전주읍 9명, 전주시 9명, 전주군 12명으로 수정가결하게 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전주군에서 1명이 늘면서 4인 선거구도 완산구에 이어 덕진구에도 생기게 됨으로써 중선거구제의 취지에 부합하는 결과를 도출하게 된 것이다.

한편, 이번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가결된 사항은 21일 본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김진성 기자

김춘진 도지사 예비후보 "공공보건복지 확대 추진"

산후조리원·노인요양원 보건 의료교육기관 등 추진

김춘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예비후보가 "공공보건복지 확대를 통해 도민들의 건강한 삶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김춘진 예비후보는 19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공산후조리원과 도립공공노인요양원을 신설하고 폐교된 서남대에 대응하는 공공보건의료 교육기관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예비후보는 "사상 최악의 출산율이 국가 미래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산모들이 걱정 없이 출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공산후조리원'을 신설, 공공 모자보건사업 기반을 구축하여 '작게 쓰고 크게 키우는' 행복한 육아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산모들이 안심하고 출산할 수 있도록 지역의료원 및 보건소 부설 공공산후조리원을 점진적으로 개설해, 의료 공공성 강화는 물론 전북이 산후조리 모범지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우리나라는 고령사회에 접어들었고,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초고령사회로 달려가고 있다"며,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년의 삶은 국가와 지방정부가 책임져야 하며, 공공노인요양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에서 도립공공노인요양원의 설



김춘진 예비후보는 19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공산후조리원과 도립공공노인요양원을 신설하고 폐교된 서남대에 대응하는 공공보건의료교육기관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립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료교육기관'을 설립하여 OECD 국가 중 최** **국내의 군의원과 공중보건의 등의 부족을**
 아울러 서남대에 대응하는 '공공보건의 **하위권인 공공보건의료인력을 확충하고** **해소하겠다**고 전했다. /김진성 기자

정세균 "시사저널, 악의적 보도... 금주 중 고소"

정세균 국회의장 측은 19일 포스코 송도사옥 매각에 개입했다는 '시사저널' 보도와 관련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으로 금주 중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수 대변인은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현재 법리검토를 하고 있다. 검토를 끝마치는 대로 고소를 할 예정이다. 금주를 넘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저널은 이날 정 의장은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의 중앙선거대책위원장인 지난 2014년 6월 지인 박모씨의 부탁을 받고 포스코 측에 '송도사옥을 더 높은 가격을 받고 팔 방법을 연구해보라'고 요구한 녹취를 공개했다.

이에 정 의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포스코건설 매각 과정에서 불법적 개입이나 부정 청탁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정 의장은 "시사저널 기사는 뇌물 의혹이 있는 다른 정치인들을 주로 다루면서 저의 녹취 내용이 마치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처럼 끼워 넣어 제가 뇌물을 받은 것처럼 보도했다"고 지적했다. "또 시사저널 표지에 제 사진과 함께 제가 불법·부정 청탁의 당사자로 보이게 하는 제목도 달았다"며 "부정확하고 악의적인 해당 기사에 대해서는 즉각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스

